

이슈브리프 통권197호  
(2020. 6.19)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제197호

성기영 안보전략연구실



## 국문초록

---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방식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퇴로를 차단하는 극적인 액션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나 '북미관계 견인론' 등에 썩기를 박는 한편, 이를 동력으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정책의 총괄책임자로 공식화한 이후 김 부부장이 직접 청와대를 맞상대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 국면을 활용해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부부장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예고한 후속 조치들을 시행하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예상하게 한다. 최근 내부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관계의 초긴장 상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정면돌파전'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

핵심어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부부장, 9·19 군사합의 파기

---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성기영 (안보전략연구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청와대도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경고함으로써 남북관계는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예고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내에 군 병력을 재투입할 경우 남북관계는 2000년 6·15 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직접적 충격은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수하면서 까지 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이나 합의서 파기가 아닌 건물 폭파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정치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9·19군사합의를 통해 철수했던 비무장 지대(DMZ) 감시초소(GP)에 경계병력을 다시 투입하겠다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 대남 분노 표출 위해 극적 효과 노려

무엇보다 북한은 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 미이행과 하노이회담 실패에 대한 분노를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표출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3대 기능인 당국 간 협의, 민간단체 지원, 편의왕래 보장 등 교류 협력을 위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자 했을 것이다.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나가면서 퇴로를 차단하는 극적인 액션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나 ‘북미관계 견인론’ 등에 썩기를 막는 한편, 이를 동력으로 삼아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대남정책 총괄책임자로 격상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직접 맞상대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 국면을 활용해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 인근에서의 대남 뼈라 살포를 통해 김여정의 지시 이행을 위해 전군, 전민, 전당이 일심단결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 김여정, 문 대통령 저격수 자임

지난 4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는 시간이 갈수록 특정 현안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인 17일 공개된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 하지만 앉았을 뿐 “남조선 당국자”라고 칭하며 6·15선언 20주년 축하 내용을 조목 조목 비난하고 있다. 지난 3월 북한의 화력전투 훈련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 직후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왔던 첫 번째 대남 비난 담화에서도 김 부부장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6월 들어 두 차례 담화에서도 “남조선 당국자”나 “남조선것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제삼은 바 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우리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해 직설적 비난이 담긴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직접 겨냥해 비난한 것은 17일 담화가 처음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섰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전날 통일부의 입장보다 수위가 높은 “몰상식”과 “무례”와 같은 표현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은 남북 관계를 제물로 삼아 대외전략의 돌파구를 모색해보려는 고육책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톱다운 외교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결정적 장애를 초래할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시종 앞서가고 있는 상황도 북한의 계산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관계라는 플랫폼을 통해 북미외교에서 북한이 당한 수모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했을 것이다.

## 예고한 조치들 하나하나 이행

이렇듯 북한이 대남·대내·대외전략에 대한 복합적 고려를 발판으로 마련한 시나리오에 따라 연속행동에 나선 이상 남북관계의 추가적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우선 김여정 부부장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예고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이미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 △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 군 투입 △비무장 지대 GP 경비병력 복귀 △전투군무체계 격상 △대남 뼈라 살포라는 네 가지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 중 첫 단계 조치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대로 비무장지대 내 경비병력 복귀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비병 재무장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성공단 건설과정에서 개풍군, 금천군, 토산군 등 후방으로 빠졌던 2군단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중 일부를 원위치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러한 조치들에 나설 것이다. 6월 15일자 『로동신문』이 밝힌 대로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행동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일 통전부 담화에서 김여정 담화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한다”고 언급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했고, 연락사무소 폐쇄를 암시한 13일 담화 이후 역시 사흘 만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바 있다.

## 청와대·국방부·통일부 일사불란한 강경 기조 유지

둘째,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육상과 해상을 막론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후속행동과 우리 군의 대응조치 수위에 따라 상황은 추가 악화 쪽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13일 담화 이후 이틀에 걸쳐 청와대와 안보·통일 관련 부처들이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입장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청와대(“감내 않겠다”)와 국방부(“대가 치르게 될 것”), 통일부(“응분의 책임”)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남북관계의 일시적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원칙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최근 내부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관계의 초긴장 상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정면돌파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로동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사항인 정면돌파 노선은 물론 “자력부강”이나 “자력번영” 등의 구호가 정책노선을 뛰어넘어 이미 혁명사상의 지위로 까지 격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면돌파 노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총력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적 수단을 총동원하려는 북한의 절박함도 읽혀진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당일 아침 『로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적대세력들의 압살광풍을 자강력 증대의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력부강 노선이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대내정책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하루 전인 15일 『로동신문』 1면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여름철 답사 시작”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찾은 이후 당 간부 및 각급 기관과 단체 구성원들의 백두산 성지순례가 이어진 바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당시와 같은 백두산 순례 열풍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대규모 대남 뼈라 살포 통해 내부 결집 유도

군사지역 내에서 대남 뼈라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북한이 이미 『로동신문』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를 “격노한 민심에 부응한” 조치로 포장한 데다 “각계각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대적 뼈라 살포투쟁에 떨쳐나설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과는 달리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규모 뼈라 살포에 나섬으로써 내부 결집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대남)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라고 밝힌 것도 대남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내적 수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적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까지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와 긴장고조 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특사 제안 사실을 공개하면서 밝힌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화국 경내에 대한 어떠한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단기적 손실보다는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통한 정치적, 장기적 이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